

한숨 돌린 휘발유 가격... 경유값 역전현상은 당분간 지속

약 5개월 만에 '1800원대' 진입
유류세 추가인하분의 4배 이상 ↓
유가안정 때까지 전국 주유소 점검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당 1800원대까지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당 1897.3원, 경유는 1982.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시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 인하 이후 한 달 만에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추가인하분의 4배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휘발유 가격은 1800원대에 진입했으나,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유류세를 최대폭인 37% 인하한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 하락해 7월 31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97.3원, 경유는 리터당 1982.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3월 9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800원대에 진입했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인 6월 30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47.6원, 경

유는 리터당 185.1원 하락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인하분(7%p)의 4배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월 30일 2144.9원, 경유 가격은 2167.7원까지 치솟았다. 유류세 추가인하분은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다. 경유의 경우,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7월 첫주 배럴당 127.0달러에서 7월 넷째주 112.9달러로 떨어졌고, 국제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52.8달러에서 139.4달러로 각각 하락 추세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통상 국내가격 반영시 차는 약 2주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시장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시행 한 달간 자영업자들은 2137.1원에서 1831원으로 리터당 306.1원, EX알뜰은 2119.6원에서 1841.5원으로 리터당 278.1원 인하했다.

일반 정유사들 주유소 평균가격도 같은 기간 2146.3원에서 1900.4원으로 리터당 245.9원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이

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 31일 기준 주유소별 휘발유가격은 SK 주유소 1904.8원, GS 1904.9원, 에스오일 1897.6원, 현대오일뱅크 1893.3원이 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에 맞춰 '정유사-주유소 시장 점검단'을 운영, 지난달 말까지 총 10회 점검을 진행했으며, 향후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8월 말까지 전국 4000개 이상 주유소를 대상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하며, 현재까지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5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내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체와 점검회의를 개최, 시장상황 점검 및 가격 인하를 독려하는 등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달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 발표”

원희룡 장관 “지역 물량 미세 조정
양적공급보다 제대로 된 혁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이달 10일 전후로 ‘250만호+알파(α)’ 주택공급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을 8월 중에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이 “최근 주택경기 악화로 대구나 경북은 전국에서 미분양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할 때 비수도권은 경기 추세나 미분양 주택,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내용 구성 등은 당면

히 변화하는 상황이나 경기상황,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점유율이 상대국에 비해 낮아 최근 주택 경기가 위축되는데도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와 꾸준한 공급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 양적 공급보다 내용에 있어 제대로 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른 번 가까이 되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다”며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력수급 녹록치 않아... 원전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박일준 2차관, 경주 월성 원전 방문



박일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일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 현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일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수급 여건이 녹록치 않아 원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 원전을 방문해 여름철 원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정비 중인 원전은 안전하게 정비 후 적기 가동해 여름철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월성 2호기, 한빛 3호기, 한빛 4호기 등이다. 박 차관은 이어 올해 3월 준공한 월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인 월성 맥스터를 방문해 안전한 관리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건식저장시설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한수원에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역과 더욱 소통하며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1975년 상용화된 이래로 50여년간 사고 사례가 전무하다. 현재 33개 원전 운영 중 22개 국가가 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보공단, 보건·의료생협 감독기능 강화

‘사무장병원’ 감시 확대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의료생협을 통해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활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3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간 시·도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 시·도지사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

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지사가 생협의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관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생협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EU산 동·축산물 위생조건 적합시 수입

수입위생조건 일부 변경안 행정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동·축산물도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유럽연합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8월 1일~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

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 11개국에서 가금 및 가금제품을 수입하고, 여기에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을 포함한 14개국에서는 돼지와 돈육제품을 수입하며 수입위생조건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수출국에서 HPAI나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 수입은 즉시 중단되지만, 발생 농가에서 떨어진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